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전대 설문 결과 83.7% 찬성...주 52시간 근무 준법투쟁도 조대도 78.3% 동의...“더 이상 부끄러운 스승 되지 않을 것”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한다. 24일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부터 하룻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수 273명 중 257명(94.1%)이 참여해 215명(83.7%)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데 찬성했다.

이중 147명은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 사직서를 낼 계획이며 나머지 110명은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법정 근무시

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 준법 투쟁을 하는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장은 김윤하 교수가 선출됐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한 달째 텅 빈 의대 강의실과 불 꺼진 병원, 의국 등을 보면서 의대 교수로서 심한 자괴감과 참담함을 억누를 수가 없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졸속으로 자행된 의대 증원과 강제 배정은 필수 의료 확충과 지방 의료 고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무계획적이고 교육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 정원의 확대와 강제 배정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교수들도 용감한 제자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스승이 되지 않도록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이날부터 차례로 정지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애리 기자

이와는 별도로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2차례 학사 일정을 연기했으며 25일 개강하기로 했으나 4월15일로 다시 한 번 학사 일정 재개를 미뤘다. 앞서 비대위를 구성한 조선대 의대로 관측된다. /김다이 기자

교수들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교수 161명 중 129명이 참여해 78.3%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전국외과교수비대위의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25일까지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교수평의회 차원에서 취합해 전공의 처벌 등이 가시화되면 의대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사직과 별개로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이나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견에 62%가 동의해 단축 진료 등 진료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흥문 조선대 의대 교수평의회 의장(비대위원장)은 “재학생 65명 가운데 90%가 넘는 7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교수 상당수가 제자들의 의대 증원 반대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사직서를 낸다고 당장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한 달여간 환자를 최대한 보살핀 뒤 병원을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 일당 무더기 ‘유죄’

장애인·탈북민 명의 사용 3명 집유...제공 등 가담 18명 벌금형

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로 확보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A(62·여) 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하게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광주 동구와 화순군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11명의 명의로 특별공급 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모집책 3명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소유 장애인과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

별공급 청약신청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 기간에도 다른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거래됐다.

명의를 제공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A씨 등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의 경우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 전매로 차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등의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에 따른 금전적 이득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치매노인 추락사’

병원 관계자들 집유·벌금형

전남 한 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미화원과 간호사에게 ‘관리 부실’ 책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A(63)씨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곡성군 소재 병원에서 각각 미화원과 간호사로 근무한 A·B씨는 지난해 3월1일 해당 병원에서 치매 노인이 병동을 배회하다 잠기지 않은 베란다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다시 잠그지 않았고, B씨는 낙상·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안재영 기자

순간풍속 ‘시속 89km’ 사고·피해 잇따라

목포서 타워크레인 상판 휘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89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각종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부터 전남 도서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오후 3시 기준 고흥·여수·해남·완도·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등 육상으로 확대됐다. 강풍주의보는 육상 기준 시속 50.4km

(초속 14m) 이상의 풍속 또는 순간 풍속 시속 72km(초속 20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신안군 가거도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89km를 기록했다. 강풍주의보 발효에 앞서 예비특보가 내려진 오전 11시40분께 목포시 상동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선 강풍에 타워크레인 상판이 휘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구조물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져 차량 5대와 인근 숙박업소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목포시 등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강풍에 휘터워크레인 상판을 안전하게 해제했다. 바다의 물결도 1.5~3.0m로 높게 일어 서해와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교통편 차질도 빚어졌다. 22일 여수공항에서 제주와 김포로 출발하는 항공편 2편이 지연됐고 광주공항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편 12편이 늦어졌으며 전남권의 여객선 53항로 79척 가운데 35항로 43척의 운항이 일시 통제되기도 했다. /안재영 기자

‘강제동원 피해’ 가족들, 日 전범기업 항의 방문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들의 가족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직접 찾아 사죄를 촉구한다.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양금덕·정창희 등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자녀는 25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사를 찾아 사죄·배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

해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해왔다. 피해자 가족이 일본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제로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언론·시민 등에게

피해자의 현황을 알리고, 일본 기업의 사과·배상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정창희 할머니는 사망했고, 이춘식 할머니·양금덕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힘든 상황이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 일정에 각 소송대리인·지원단체 인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라며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일본 기업은 6년째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HEALTH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HD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금호빌드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